

6.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년 4월 1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기획조정실장)
- 회부일자 : 2022년 4월 5일
- 상정일자 : 제29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년 4월 15일), 원안 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2022. 1. 1.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2. 1. 1. 시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 등의 개편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제16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써 규약 개정을 위해 대구광역시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함.

## □ 주요내용

- 2022년 1월부터 2단계 재정분권 합의안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편입됨. (안 제1조, 안 제5조 제1항제5호, 안 제16조)
-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편입됨에 따라 “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변경함. (안 제5조제1항제1호·제5호·제7호·제8호, 안 제8조제1항제5호, 안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14조제2항,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7조제1항 및 제4항, 안 제28조)
-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편입됨에 따른 관련 부처 및 인원수 변경을 반영함. (안 제6조제2항, 안 제12조제1항, 안 제18조제3항)
-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기초지원계정 신설.  
(안 제27조부터 제35조까지 신설)

##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정미정)

### ○ 이 동의안은

- ▶ 2021. 7월 28일 정부는 지방재정확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확정·발표하였고,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 요약]

- ◆ 지방소비세율 4.3%p(연 4.1조원) 인상  
(연도별 지방소비세율 : ('18년) 11% → ('20년) 21% → ('22년) 23.7% → ('23년) 25.3%)
- ◆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10년간 10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연 1조원)
- ◆ 기초연금 등 연 0.2조원 규모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율 인상

- ▶ 발표안 중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향후 10년간('22년 ~ '31년) 매년 정부 출연금 1조원('22년은 0.75조원)을 조성키로 하였음.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22. 1.)하였으며, 개정법령에 따라 기존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sup>9)</sup>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수탁받아 운영하게 되면서 현행 조합 규약 개정을 위해 시·도 지방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임.

##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개정 절차는,

- ▶ 지방자치법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및 제181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변경 및 해산) 규정에 따라 규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합원인 각 시·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규약 개정 절차를 완료하게 되며,

### 《 규약개정절차 》

【안건상정】 → 【조합회의 의결】 → 【안건확정】 → 【시·도 통지】 → 【시·도 의회 승인】 → 【조합에 통지】 →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 【의안확정】

## ○ 이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개정 주요 사항은,

- 9)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 수도권 규제합리화('08년)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 마련에 따라 2010년 기금설치 및 자치단체조합 설립
- 조합조직 : 위원 20명(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 시도 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전문가 2명)
  - 기금재원 : 수도권 자치단체 출연금(지방소비세 35%) ※21년까지 4조 2,589억원 조성
  - 기금용도 : 전환사업보전(국가→지방 이양사무), 지자체 재정지원, 융자지원

-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에 새로이 편입되는 지역소멸대응기금에 관한 사항 적용(안 제1조, 안 제5조~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12조~안 제18조, 안 제36조~안 제37조)
- ▶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조합의 구성 위원수 등 확대(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13조~안 제17조, 안 제36조~안 제37조)
  - 조합의 심의·의결기구인 조합회의에 행정안전부 균형발전 담당국장과 균형발전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안 제6조제2항)하여 기존 20명에서→23명으로 확대하였고, 행정안전부 균형발전담당 과장의 실무협의회 참여(안 제12조제1항)와 기금 결산검사 위원을 증원(3→5명)함.(안 제18조제3항)
-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관리방안 규정(안 제27조~안 제35조)
  - 지방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규약 내용에 반영한 것으로,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안 제27조, 안 제28조), 국가와 지방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협약(안 제29조),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의 운영안(안 제30조~안 제35조)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음.

## ○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방법과 대구 지역 배분 규모는

-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1조원('22년 0.75조원) 규모의 정부 출연금과 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고,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기금이 운용될 예정임.

전체 재원(1조원) 중 광역지원계정에 25%(0.25조원), 기초지원계정에 75%(0.75조원)가 배분되며,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에 배분될 예정이며, 기초 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21.10.19. 행정안전부 지정·고시) 89곳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될 예정임.(참고2)

대구시의 경우 서구와 남구지역이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에 지정되어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지원 규모는 대구시에 지원되는 광역지원계정\*(정액)의 경우 '22년 23억원, '23년 이후 매년 32억원 정도이며, 서구·남구 지역에 배분되는 기초지원계정의 지원액('23년 이후)은 인구감소지역 평균액\*을 기준으로 '22년 60억원, '23년 이후 매년 80억원 정도로 추정됨. 다만 기초지원계정의 규모는 각 기초단체가 제출한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계정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역별 평균액의 최대 200%까지(160억원) 지원받게 됨에 따라, 사업신청 전 치밀한 추진전략과 계획수립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광역지원계정은 정액 지원(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등 고려)

\*\* 기초지원계정 지역별 평균액('23년 이후) : 약 80억원(7,500억원×95%/89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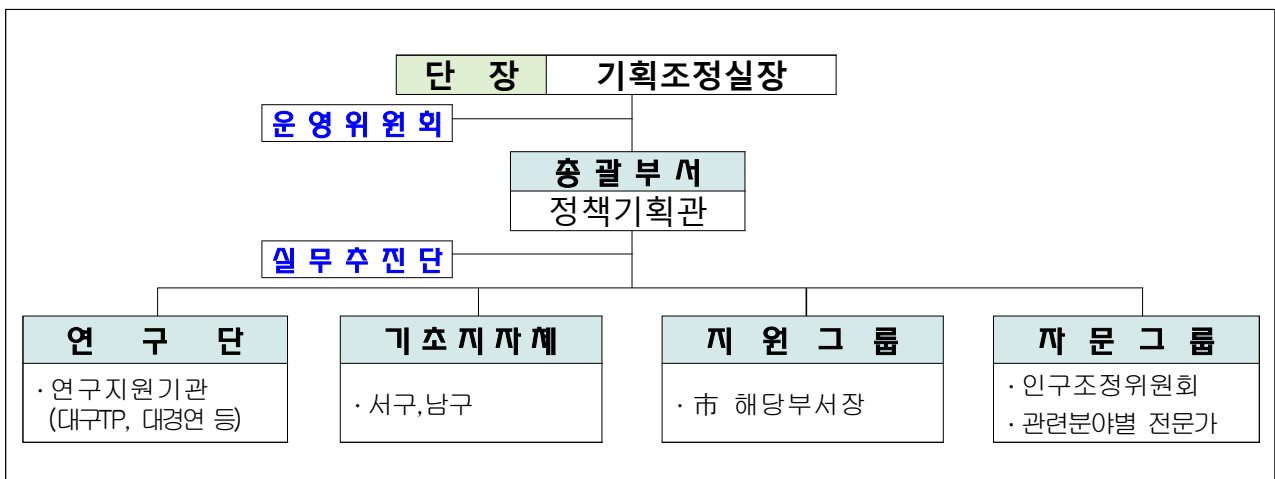
## ○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 ▶ 이번에 제출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지방이 직면한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역경쟁력 저하 등 현 위기

추세를 전환하고,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정책사업 추진 기회를 지자체 스스로 갖게 된 점에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향후 지방소멸기금에 더해 중앙정부의 지방을 살리는 여러 노력들이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자체는 정책 공조와 연대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임. 한편, 대구시는 서구·남구 기초지자체의 인구정책 수립역량을 배가하고, 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인구감소 위기 대응 추진단」을 발족하였으며, 추진단 산하에 ‘운영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꾸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발굴 및 계획수립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 준비에 들어간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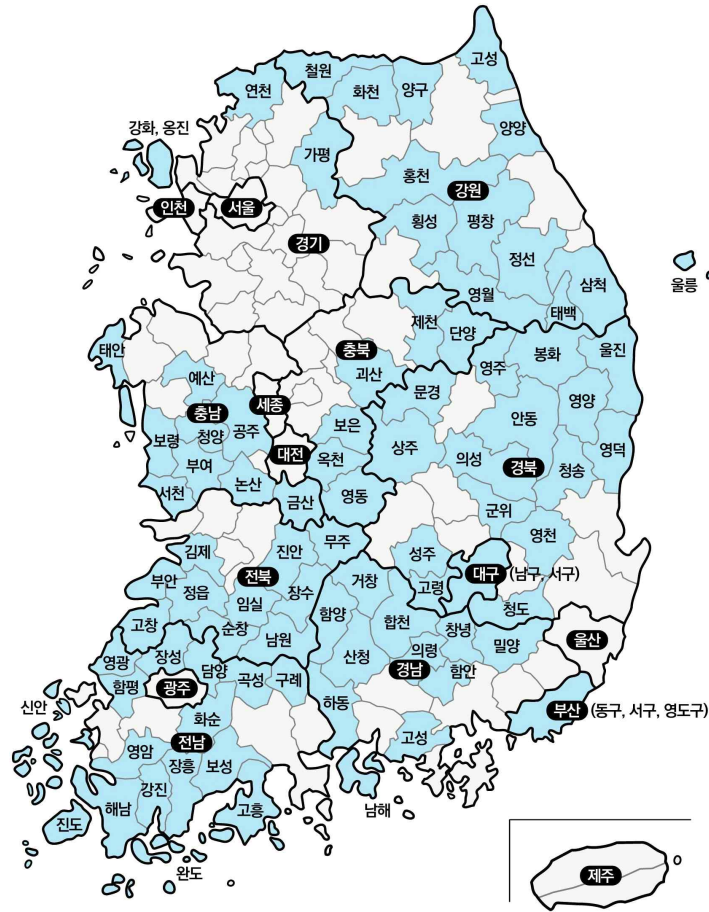
대구시는 서구·남구지역 특색에 맞는 실효적인 계획수립과 사업 추진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여, 두 지역의 인구감소 추세를 전환하고 지역경쟁력을 회복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임.

### 【인구감소위기대응 추진단】



## 참고 1

##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89개 기초지자체)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	남구 서구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단위: 억원)																	
시·도	전남	경북	강원	전북	경남	충남	충북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세종	서울
배분금액 (‘22년)	378	363	258	240	223	180	119	25	23	14	14	12	9	9	4	0	0
배분금액 (‘23년)	505	485	345	320	297	240	159	35	32	19	19	16	13	13	5	0	0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지방소멸기금사업 시행은 결국 기초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을 평가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형태죠?	○ 네. 행정안전부에서 심사를 통해 차등 지원하게 됨.
○ 1조 원 단위의 사업비가 전국의 인구 감소지역에 배분된다고는 하나, 결국은 행안부가 사업검토 후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지역 현실에 맞는 계획 수립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됨. 계획과 현실 간의 많은 괴리로 인해 실효적인 사업이 될지 의문이 생기는데?	○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정주 여건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사업수립 지침이 내려진 상태이며, 대구시와 기초자치단체, TP가 함께 힘을 모아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수정안 요지

○ 없 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